

인구감소·저성장시대, 사회운동의 길찾기

PSSP 등촌동 워크숍(2)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2023.4.4.
문설희
(사무국장,페미니즘팀)

PSSP 등촌동 워크숍(2)

✦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육아휴직 쓰면 동료에게 100만원...日 기업의 파격 실험

육아휴직 독려하기 위해 응원수당 지급
일본, 지난해 출생아 수 80만명 밀돌아



국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이 비어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제 > 국제 일반

“170cm 이상, 탈모는 안 돼”... 中, 사례금 걸고 ‘건강男’ 정자 모아

박선민 기자

업데이트 2023.02.14. 1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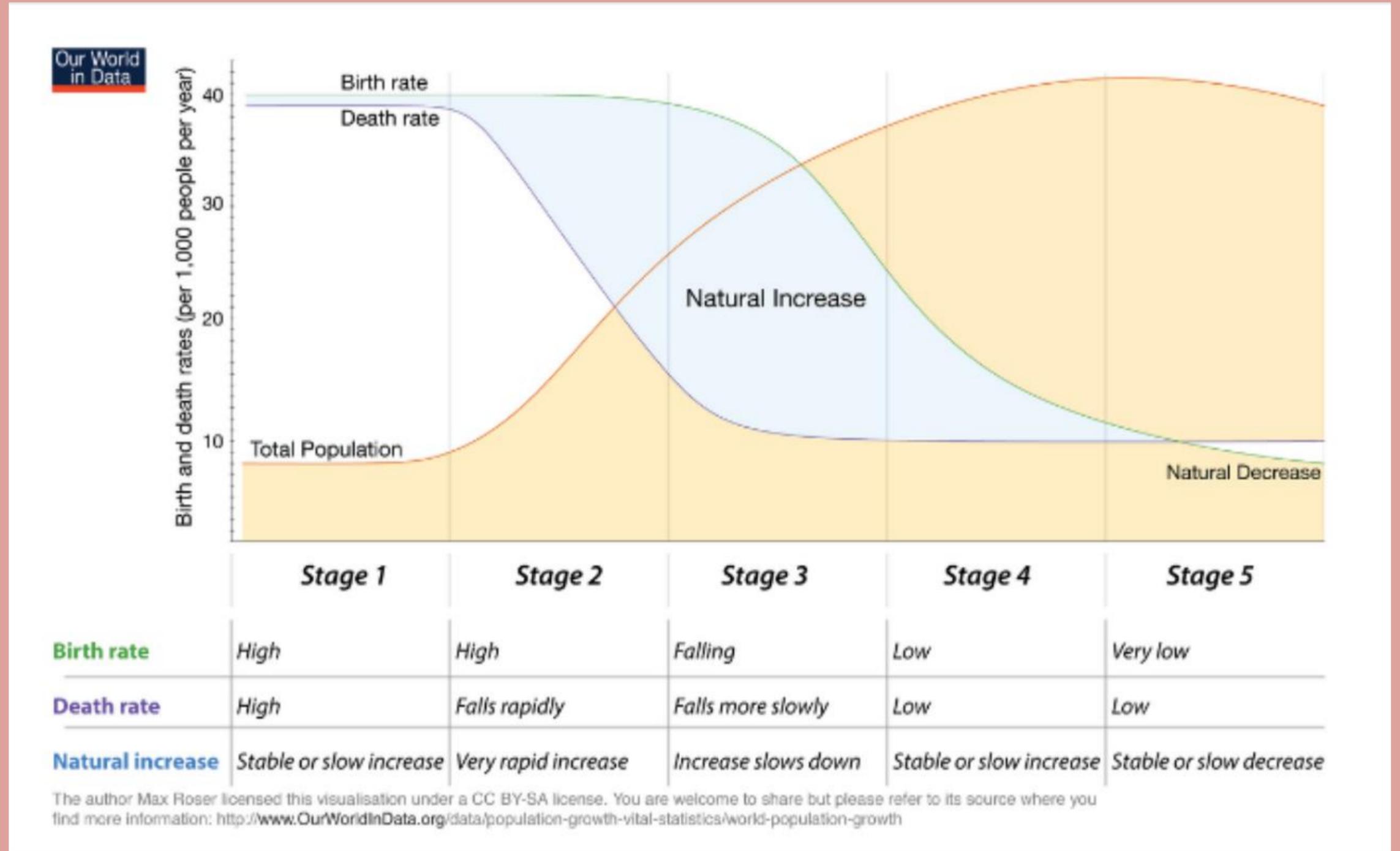
가



중국 안후이성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중국은 출생률 급락 여파로 1961년 대기근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인구 감소를 겪었다. /AP 연합뉴스

지난해 중국 출생률이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중국 정자은행들이 ‘건강한 남성’ 정자 모으기에 나섰다. 한 정자은행이 내건 조건에는 키 170cm 이상의 유전병 및 탈모가 없는 사람 등이 붙었다.

“
세계적인
저출산
”



01

산업혁명 이후
고출산·고사망 →
저출산·저사망

02

인구성장률
상승세 →
하락세

03

저출산은
세계적인
현상

용어정리

저출산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보다 낮은 현상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조출생률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사람의 비율



초저출산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되는 현상



자녀세대의 인구 크기가 부모세대와 같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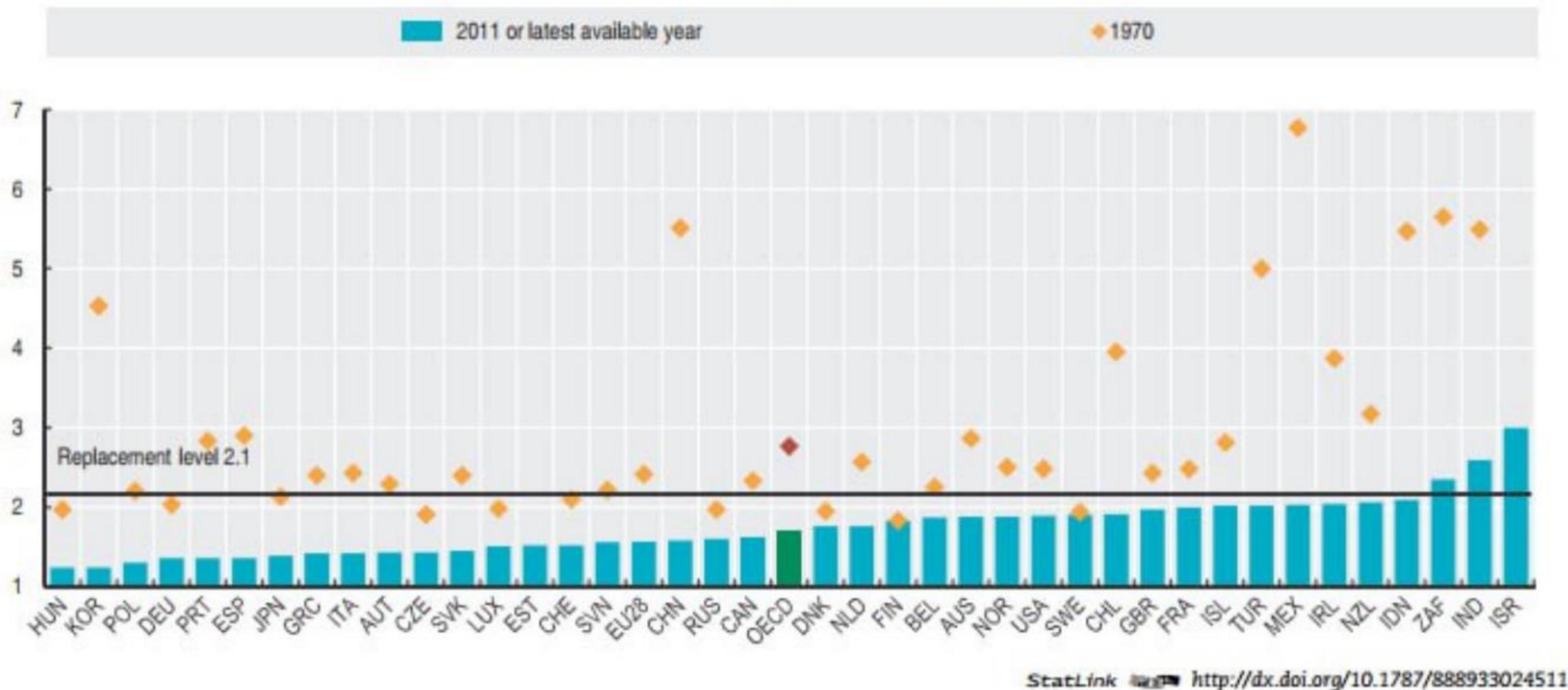


인구대체수준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s

“급격한 감소”

Total fertility rates
Number of children born to women aged 15 to 49



가임 연령대 여성 1명당 자녀
1970년대 2.7명 → 2000년대 초반 1.7명

유럽의
저출산

“ 인구론적으로 표현하면, 유럽은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20여 년 후면 우리의 나라는 텅 비게 될 것이다
(1984년 자크 시라크 파리 시장)

유럽의 저출산 경향에 대한 자극적인 언어들

백색 전염병

("핵무장보다 더없이 위험한, 임신·출산에 대항하는 새로운 무기인 피임과 낙태")

전염병 인구론

인구 붕괴

인구론적 자살

...

PSSP 등촌동 워크숍(2)

✦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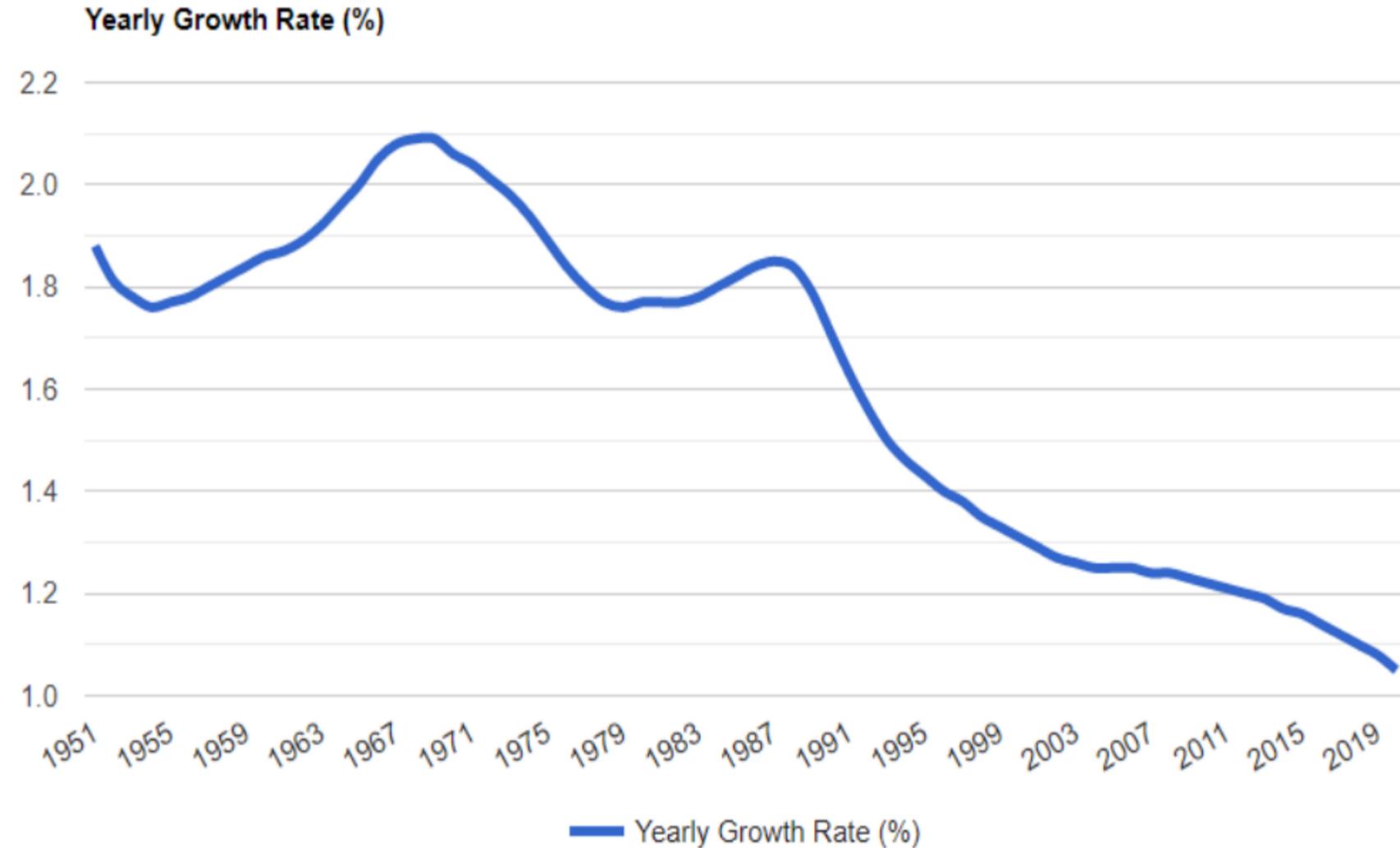
세계
인구

세계인구시계

<https://www.worldometers.info>

[/world-population](https://www.worldometers.info/world-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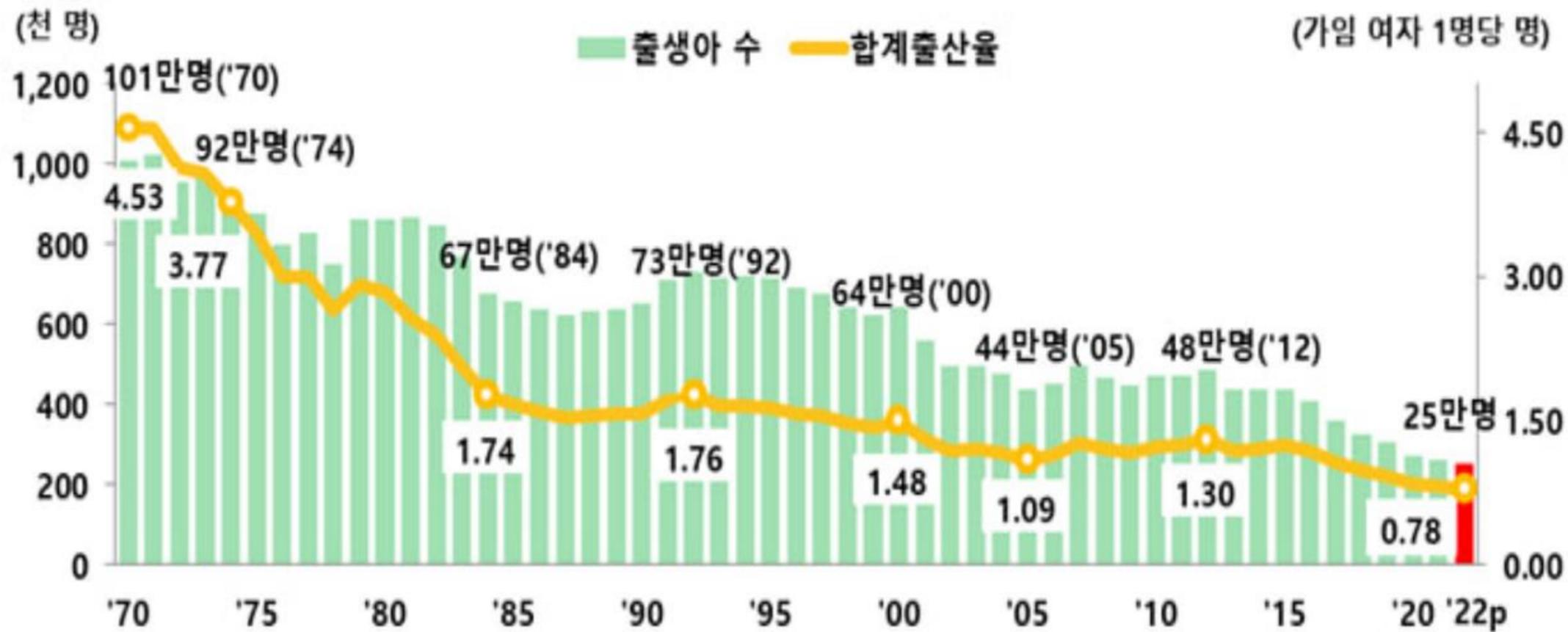
연간 인구 증가율(%)



세계 인구는 연간 약 0.84%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2022년).
세계 인구는 21세기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지만 훨씬 느린 속도로 증가할 것.

“한국의 초저출산”

[그림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2p



01

1970년
4.53

02

인구대체수준 2.10 ↓
1983년
2.06

03

2022년
0.78

2022년 합계출산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3.2.22

“0.78명 쇼크”

朝鮮日報

2023-02-23 (목) A01면

0.78명 쇼크... 한국이 사라져간다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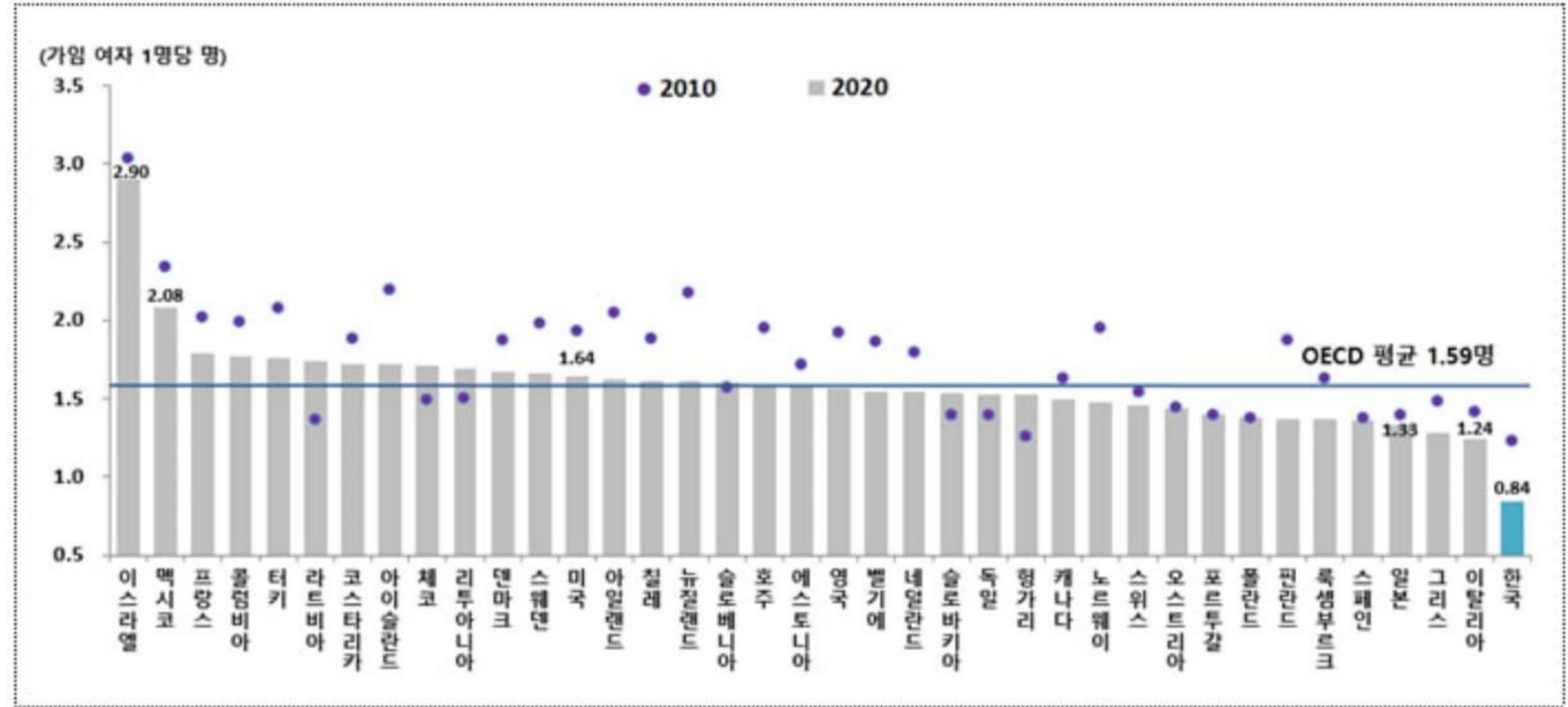


2022년 출생아 수 → 24만 9천 명, 전년대비 1만 1천 5백 명(-4.4%) 감소
한 세대 전(91년 1.71명, 71만명)과 비교 시 출산율 1/2, 출생아 수 1/3 하락

급격한 다운사우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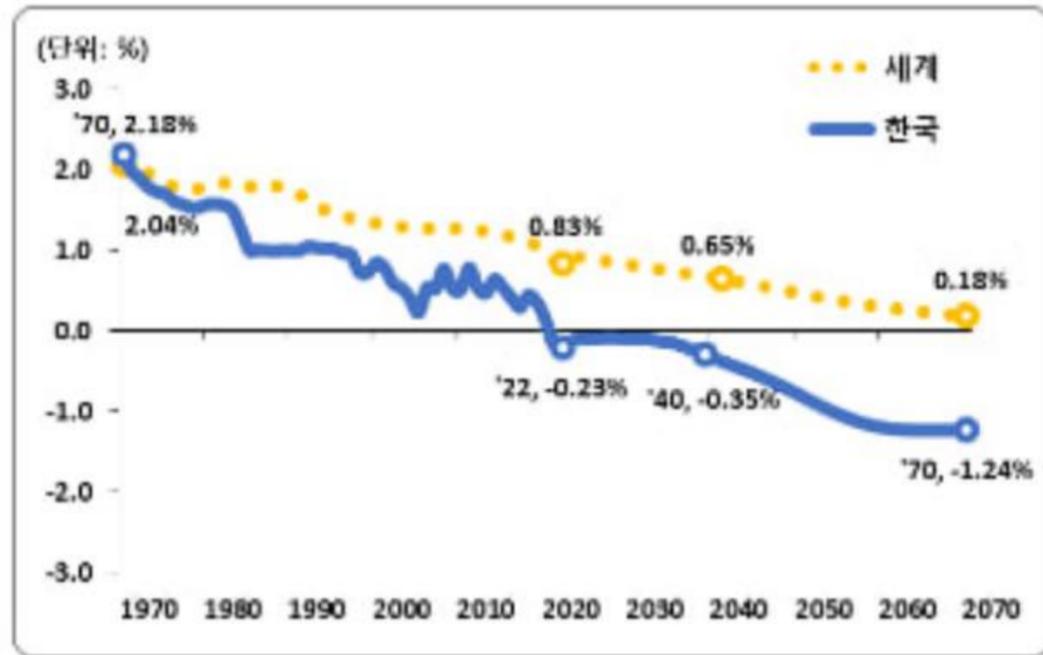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이래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게다가 초저출산 기간이 길어지고,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림 9]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2010, 2020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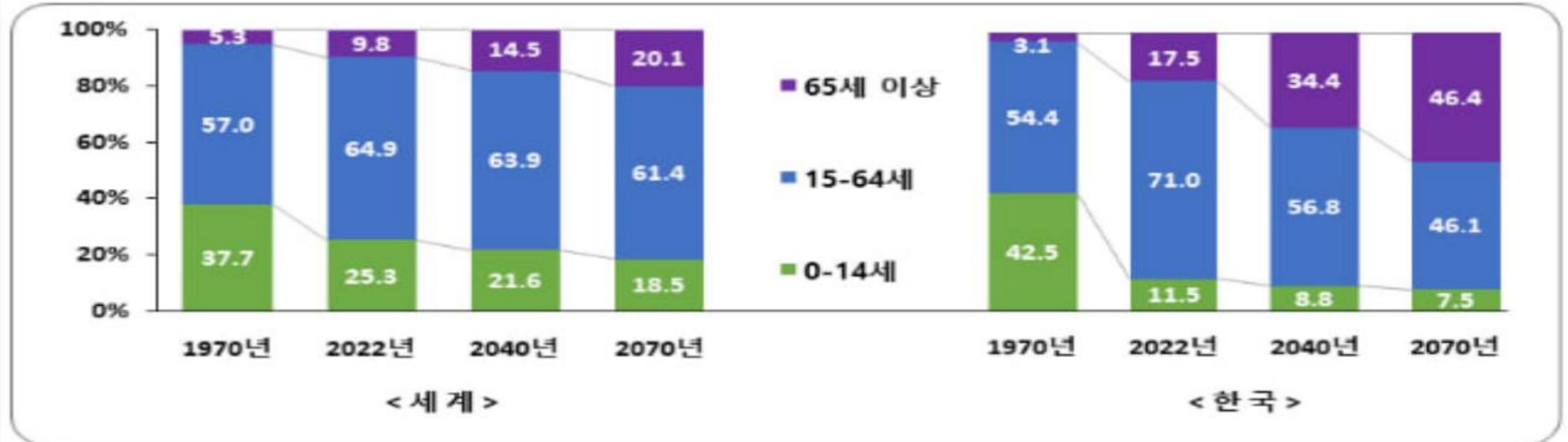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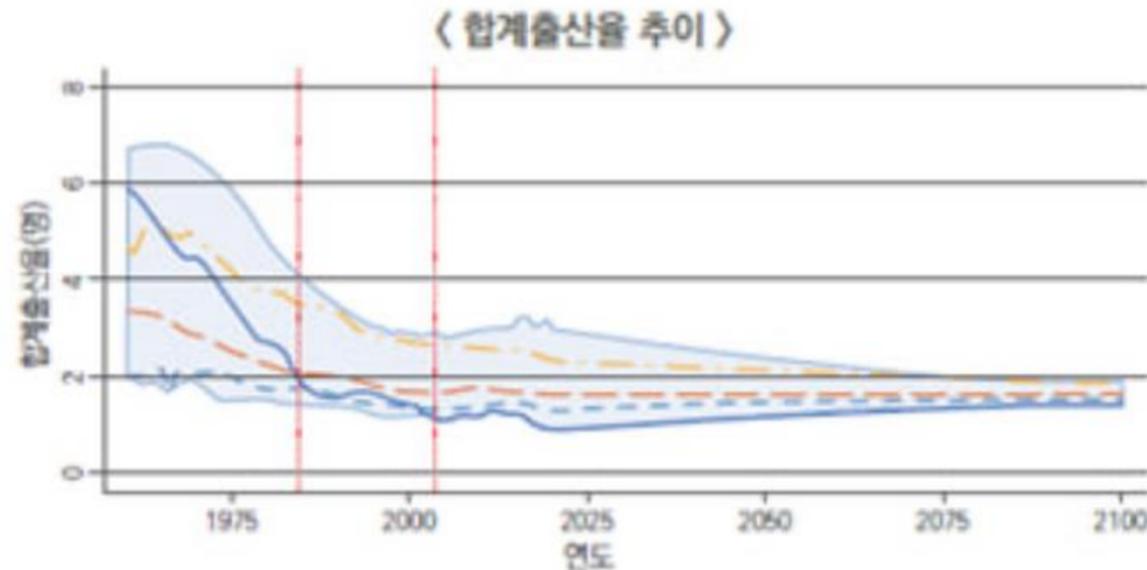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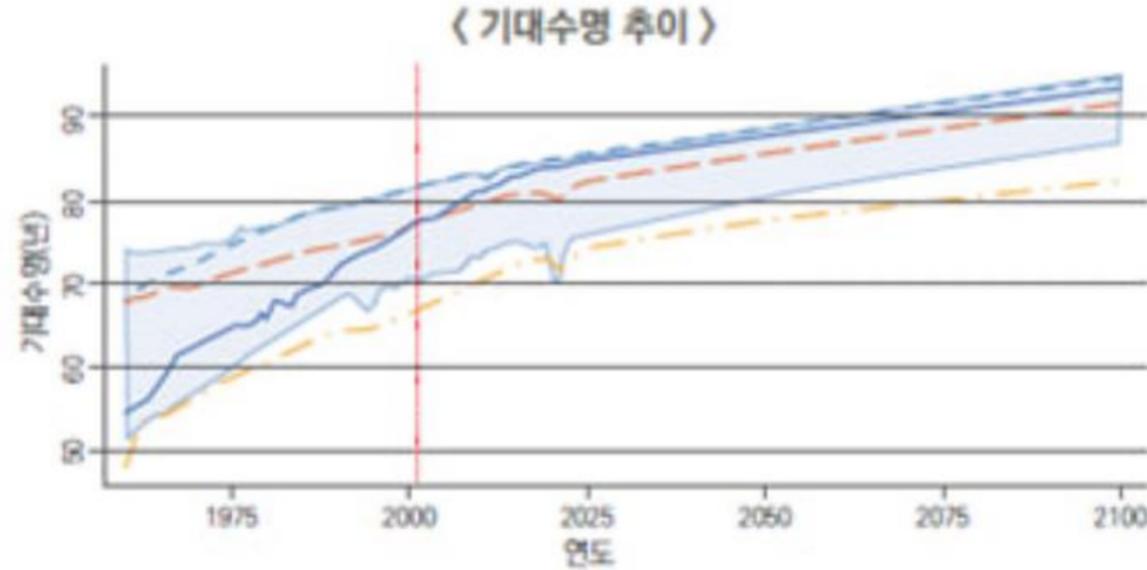


합계출산율 감소, 기대수명 증가
→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곧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의미
→ 사회의 저성장 경제위기

따라서 사회 문제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인구감소·저성장이라는
분석틀이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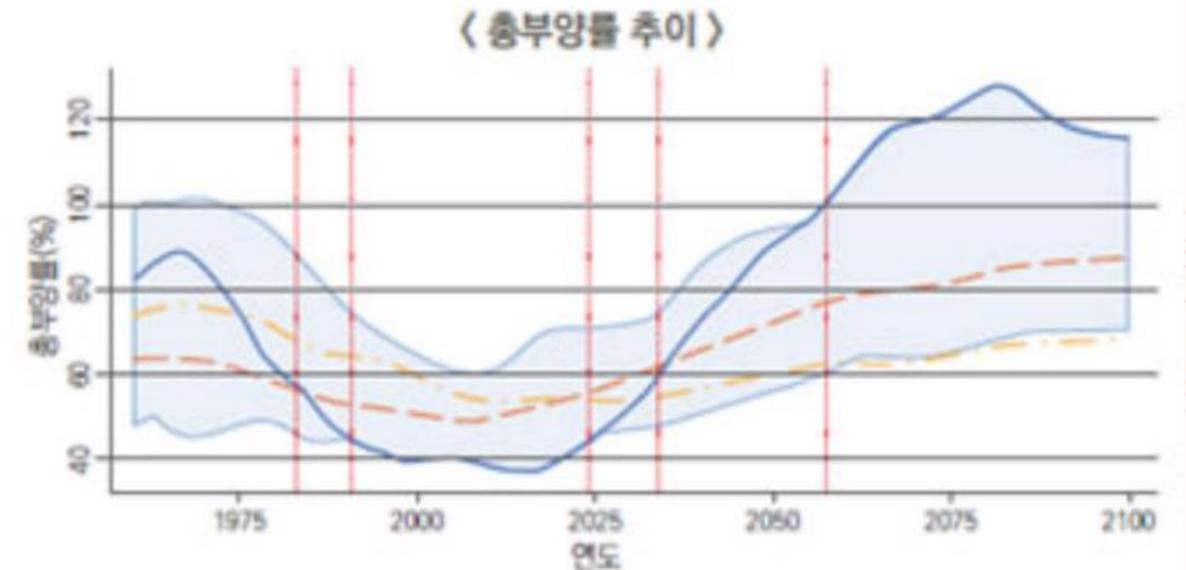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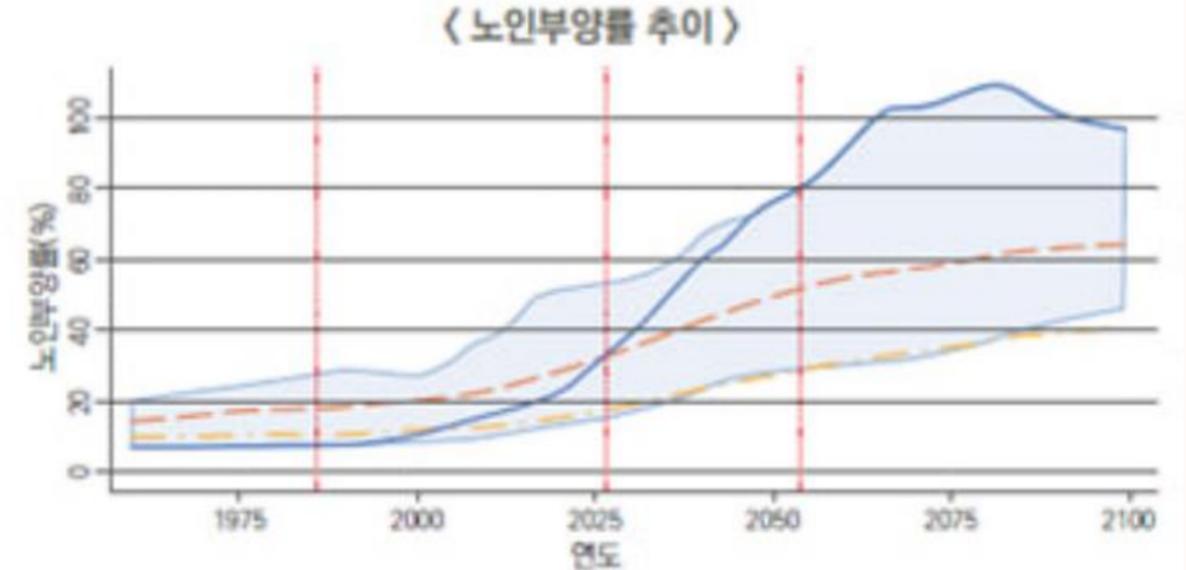
[그림 1] 주요 인구통계(1960~2100년)



OECD 최대최소구간
 OECD 평균
 세계 평균

 한국
 일본

자료: UN(2022)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OECD 최대최소구간
 OECD 평균

 세계 평균
 한국

저성장·인구감소라는 시대인식

저성장·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또다른 사회적 모순을 심화

한국의 고도성장은 주로 자본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한 손쉬운 접근법(외국 기술 도입, 농촌 인구 유입)이 한계에 도달하고, 높은 투자율은 자본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졌다. 자본축적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고 축적속도 역시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론적 전환으로 인해 노동투입도 감소세로 전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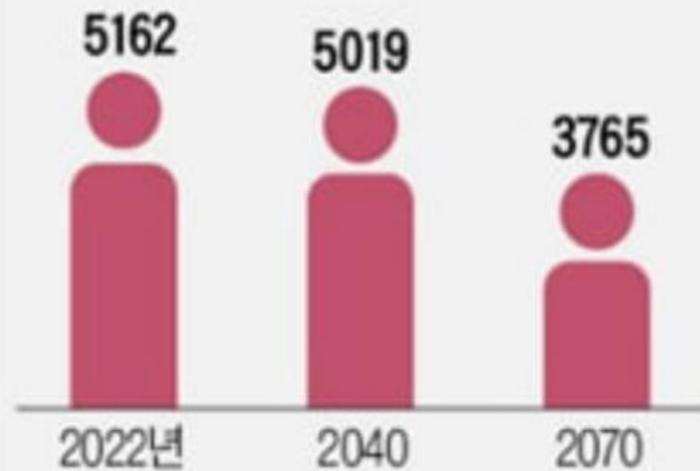
한국경제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모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청년들이 대학입시, 스펙, 취업 등을 둘러싼 경쟁에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높은 체감 실업률과 기성세대와의 격차 때문이다.

한편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진입 경쟁에 성역할 갈등이 중첩된다. 안정된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청년 세대는 가족 형성(결혼 또는 출산)을 유보하거나 포기한다.

또한 한국 사회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성의 권리 수준과 실제 여성들이 겪는 현실의 괴리가 크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상징적·제도적 성평등이 달성된 듯 보이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와 여성 노동의 저임금 부문 집중,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여성 책임은 강고하게 남아있다. 특히 한국은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과 낮은 고용률로 인해 성별 격차도 크다. 그런데 청년 남성들은 재생산의 위기를 '남성성의 위기'로 체감한다.

남성이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전통적 성역할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조적 태도에 더해 여성의 이중 부담이라는 현실은 눈감은 채 재생산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기도 한다.

줄어드는 한국 인구 (단위:만명)



고령인구 비중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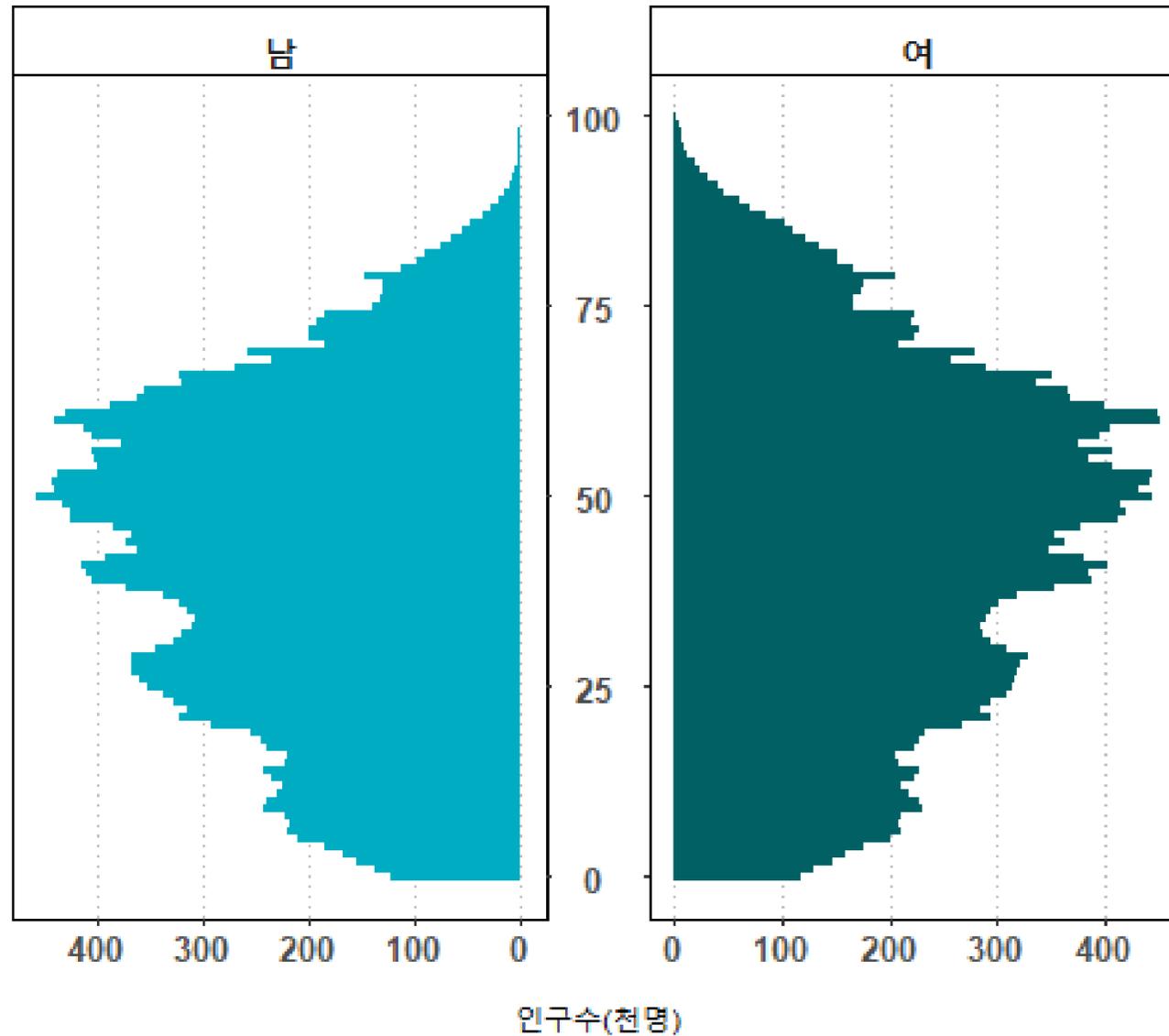
※전체인구중 65세 이상의 비중 자료통계청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학령인구 감소
 소아과 전공의 부족
 지방대학 정원미달 지방소멸
 노인부양비,의료비 증가
 연금고갈...”

세수 ▼ 사회보장 ▲

미래세대 부담증가
 세대간 통합 손상

대한민국 인구추계
 2021년 : 49979160명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인구감소·저성장 → 경제위기 심화
 → 세대·성별 갈등, 여성의 이중부담 심화

“
출산율을
높여라?
”

● 인구감소 문제를 가치관 변화(개인주의, 결혼/임신/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기는 입장
여성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정책을 제시

● 인구감소 현상의 원인을 여성의 이기심으로 오인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대상화

*2010년 이명박 정부, 저출산종합대책으로 낙태 단속 시도

“
저출산 해법은
성평등?
”

인구감소 문제를 '저출산 담론'으로 비판

저출산 현상이 성차별적 사회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여기며,
국가의 성평등 정책 및 남성의 돌봄책임을 촉구하는 입장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는 자본주의와 가족구조가 내재한 한계의

필연적 귀결이며, 아동노동 중요성의 역사적 변화 때문
성평등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인구감소 역전은 불가능

*성평등 정책, 즉 여성의 사회적 노동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의
강화는 인구감소 속도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러나 "저출산 해법은 성평등"이라는 입장은 인구감소의 원인을
잘못 짚는다는 점에서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저출산’ VS ‘저출생’ ”

“바보야, 문제는 ‘출산’이 아니고 ‘출생’이야”

국회에도 등장한 ‘저출산’ 아닌 ‘저출생’
성 차별적 용어들 개선 움직임

기사입력 2020.06.15 19:47 | 최종수정 2020.09.12 12:26



(KBS화면 갈무리)

국회 활동국 입법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이 창립했습니다



남인순 의원
2020. 7. 2. 18:08

포럼의 명칭을 ‘저출생’으로 한 것은 ‘출산’하는 여성 대신 ‘출생’하는 아이에 더 초점을 맞춘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구감소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 정책 토론회 4차 토론회

“이젠 남성을 집으로” 남성의 돌봄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2023. 1. 10(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주관 국회의원 남인순·권인숙(더불어민주당), 최연숙(국민의힘)

좌장 국회의원 최연숙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구책임의원

발제 노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돌봄에서의 남성참여 확대

다양 인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연숙 의원 고용유지율 중심으로 된 육아휴직

김미영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미영 서울대 여성연구소 소장

김규 서울100인의아빠단 단장

김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문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송영광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연속 정책 토론회

- 1차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일까? 회복 국가와 비교
- 2차 생애주기별 돌봄시스템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3차 다양한 가족 공동체, 차별없는 지원 방안은?
- 4차 “이젠 남성을 집으로” 남성의 돌봄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 5차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문의: 남인순 의원실 (02-784-5980)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노동운동의 길찾기

발제·토론 : 문설희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교육센터 '울' 교육국장)

'출산'과 '출생'은 학문적으로도 다른 개념이고 운동적으로도 논쟁이 있는데, 워크숍에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네요?

최근 합계 출~~생~~을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면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법'은 있을까요?
연금, 의료, 교육, 돌봄, 교통, 에너지 등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지금,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이 취해야 할 입장은 무엇일까요?



2023년 4월 4일(화) 오후7시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모아홀)
문의 : pssp4001@gmail.com
신청링크 : bit.ly/등촌동워크숍
공공운수노조 회원모임

그러나
“출생”(birth)과
“출산”(fertility)은
엄연히 다른 개념

인구학의 학문적 의미에서 보면 ‘출생’(birth)은 말 그대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출산’(fertility)은 아이가 생겨나고 엄마의 배 속에서 자라나 세상에 태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다.

즉 여성의 산전 산후 건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출산’으로, 학술적으로는 출생보다 오히려 출산이 더욱 여성의 권익을 고려한다 할 수 있다.

- <인구 미래 공존> (조영태) 중에서

<한겨레>는 출산과 출생의 의미가 학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출생’ 용어가 성평등이라는 지향점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통계 수치나 공식 발표, 연구 등 엄밀한 개념어가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곤 가급적 ‘저출산’ 대신 ‘저출생’으로 표기해왔습니다. 인구 정책의 목적이 아이를 낳도록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구조에 맞춰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한겨레>는 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의 경우 공식 정책 명칭인 ‘저출산’을 사용하되, ‘저출생’을 병행 표기합니다.

- "저출생? 저출산? 어떻게 다른가요" (한겨레) 중에서

➔ '출산'은 성평등하지 않은가?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중요”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 세계인구포럼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2750년에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세계 3대 난임센터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난임병원 아기천사병원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아기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 <헬로 베이비> (김의경) 중에서

저출산 = ‘출산파업’?

- 임신·출산은 파업의 수단인가, 여성의 권리인가?
-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여성이 처한 복합적 현실에 부합하는 분석과 진단인가?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도 “여성이 출산파업에 처해 있는데 진짜 문제는 저출산이 아닌 국민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며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존중하고 여성의 미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실현을 통해 본 저출산 문제는?”

“가임기와 육아기 여성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2세대로 집에서 평등하게 교육받고 자랐어요. 사회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결혼**해서 아이 낳아 키우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좌절**합니다. **여성들의 출산 포기이자 출산 파업 현상**이죠.”



“
적응
공존
”

'저출산' 심화의 원인으로 가족형성을 어렵게 하는 복합적 사회
경제 요인(일 육아 병행 어려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초경쟁적 사회 환경, 고용 불안 등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짚고,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불균등하게 발
생하면서 사회불평등과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는 문제로 접근.

출산을 제고가 아닌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주목. 그러나 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어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나아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

* 尹 저출산 1호 특명은 '경력단절 최소화'...육아기 재택근무제 본격 시동

"韓, 인구감소로 복합위기...의료·교육·국방·도시 정책 모두 바꿔야"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전략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이 인구 감소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왼쪽부터 정준오 국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윤성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병연 기자

"인구 감소로 한국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대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는 데 그쳐선 안 되며 각종 사회문제, 질병 문제, 교육,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대안을 내놓은 방식이 돼야 한다."

"인구는 안보 문제"...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43만호 공급

황정환 기자 ★

오형주 기자 ☆

입력 2023.03.28 17:53 수정 2023.03.29 08:41 지면 A1

가가

尹대통령, 저출산위 직접 주재

육아 근로시간 단축 대폭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年 500개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그럼에도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정책 실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평가. "정책의 목표가 추상적이었다. 4차 기본계획(2021-2025)의 경우 '개인의 삶의 질 제고'가 목표였는데,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서는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말 필요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선택하여 집중하고자 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춹춹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것을 정책의 큰 목표로 세웠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 보장

양육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활용의 걸림돌을 해소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 육아기 재택근무 법적 근거 마련
- 부모 맞돌봄 위한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영아부터 초등까지 최고 수준 돌봄과 교육

춹춹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아이돌보미서비스, 시간제 보육 대폭 확대
- 유보통합 추진 및 늘봄학교 전국 확대('25년~)
-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으로 모든 아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PSSP 등촌동 워크숍(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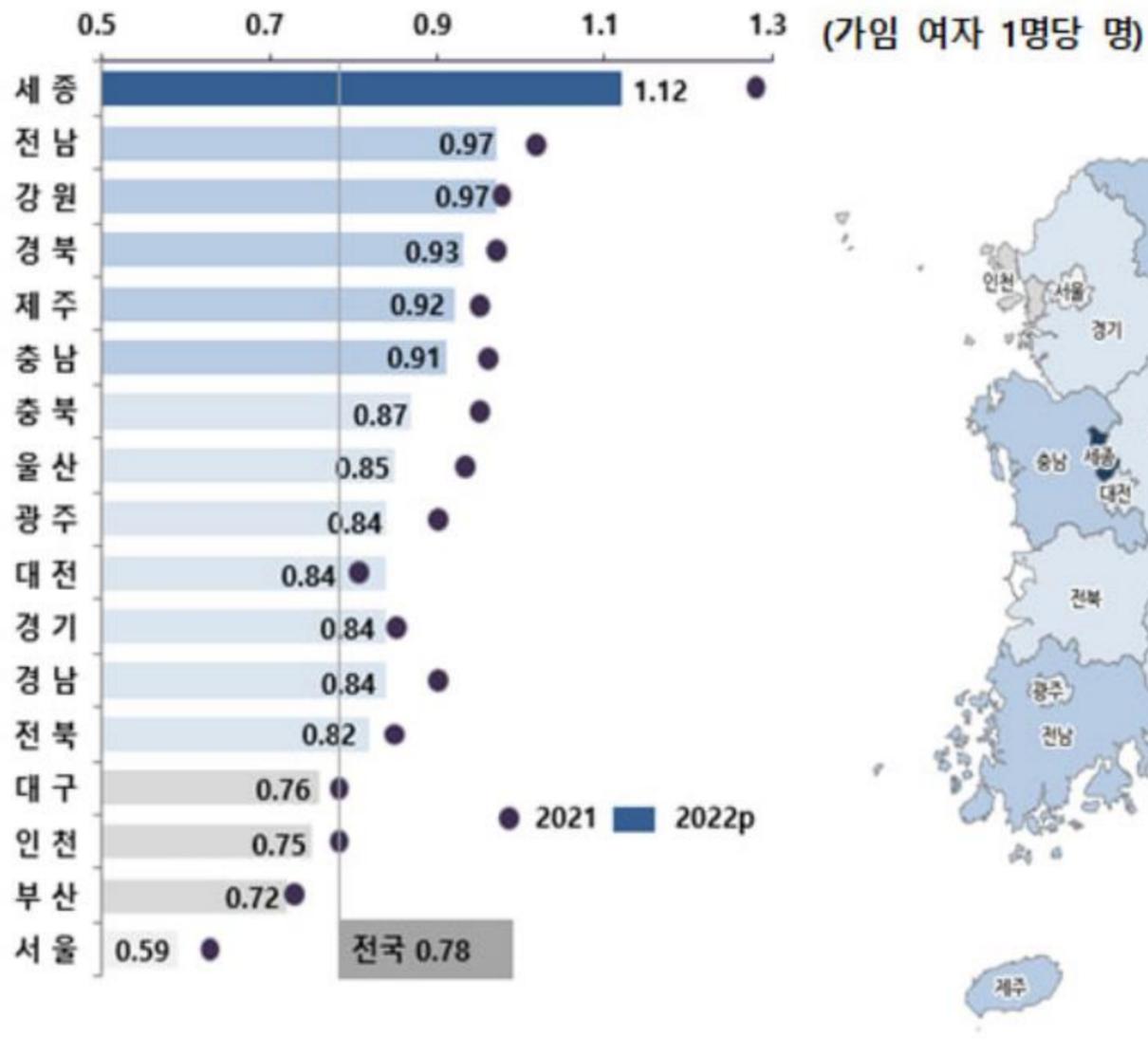
✦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공존의 전략”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와 제도와 정책
청년의 인구수에 맞춰
싹 바뀌어야

조영태 인구학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TF' 자문위원장 역임

[그림 10] 시도별 합계출산율, 2022p



저출산 근본 원인? '수도권 집중' 심화
역사상 경쟁 과열 시대 살고 있는 청년층
지방엔 부족한 여성 일자리, 수도권에 쏠려
'지방 분권'도 저출산 해법으로 고려해야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인간 본성에서 찾을
뿐,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적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
(신멜서스주의 한계)



절대적 과잉인구(인구압력) 개념 비판.
상대적 과잉인구(실업) 개념 제시.

“ **빈곤의 원인 = 인구과잉x 노동자예비군의 증가!**

출산율·인구성장률과 무관, 자본축적과 기술진보의 편향성이 원인.

마르크스
인구론

”

[한계] 맬서스 인구론, 신맬서스주의

맬서스는 '인구과잉'을 빈곤의 원인으로 설명.

(지나친 인구증가 → 식량가격 상승 → 실질임금 하락 → 생활수준 하락 → 질병에 따른 사망률 증가)

산업혁명 시기 영국 도시의 끔찍한 삶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산층의 금욕적 삶을 하층민들도 따라야한다고 주장.

그러나 맬서스 인구론의 대상은 고출산·고사망이므로 저출산·저사망으로의 전환을 설명하지 못했다.

신(新)맬서스주의는 개인의 욕구를 제한하는 발상은 실효성 있는 사회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피임'을 대안으로 제시.

전 세계적인 가족계획 사업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의 인구변천 문제를 적합하게 분석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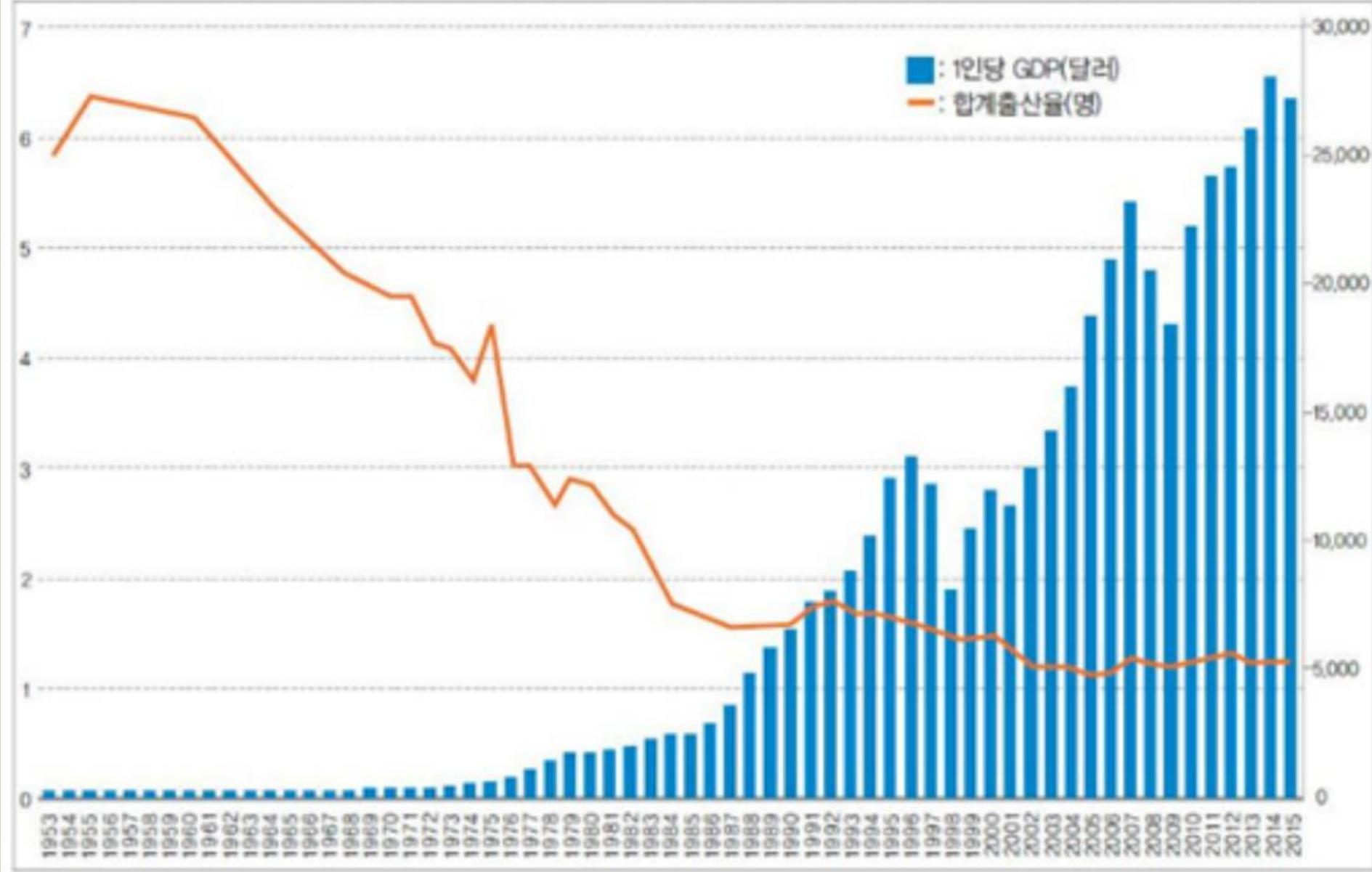
“

자본주의 인구법칙

”

임금률과 출산율·인구성장률
반비례 관계.

〈그림〉 우리나라 1인당 GDP와 합계출산율 추이(1953~2015년)



자료: 통계청

1인당국민소득·임금률·생활수준 상승 → 출산율·인구성장률은 하락.

“
역사적
가족형태
”

생산관계에 적합한 제도로서 '가족'이 역사적으로 변화

아동노동의 중요성 역시 변화



가내 공업이 성장하면서 출산이 선호되었다. 아이가 물레를 돌릴 수 있으면 스스로 밥벌이는 하는 것이었다.



보통 교육 출현으로 일인당 양육비 크게 상승. 노동계급 부모들은 '가정 근로조건'을 높이고 '교육'을



초기 프롤레타리아 가족에서 10~18살 자녀 2~3명의 소득은 가구 전체 소득의 40~60%를 차지했다.

PSSP 등촌동 워크숍(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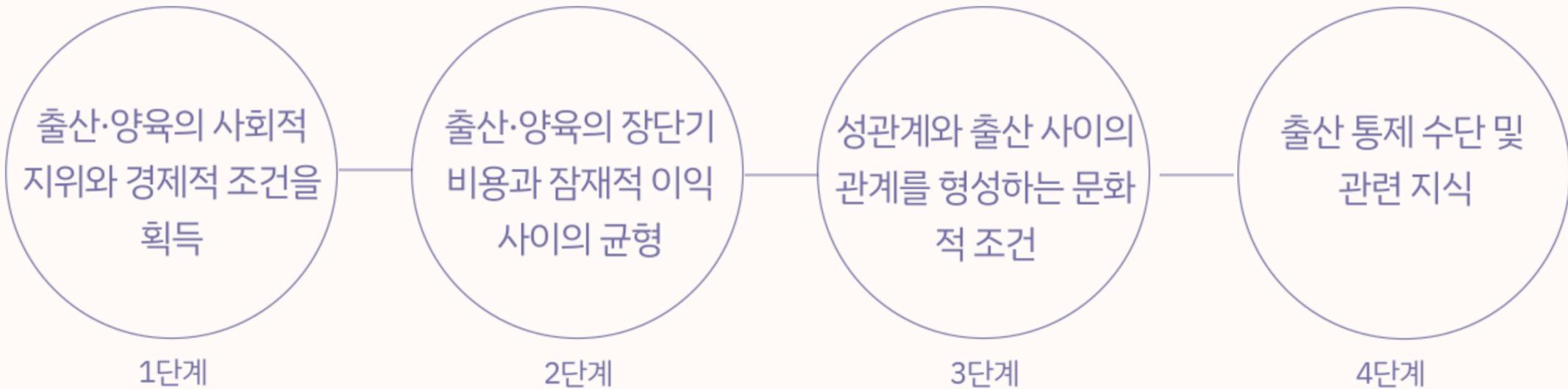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생산양식 개념과 가족형태 개념을 결합하는 관점에서 인구문제 분석. 이행에 있어 인구론적 차원의 문제들이 미치는 영향을 논증하고자 함.
 Seccombe, Wally(1983), "Marxism and Demography", New Left Review, Jan.

	생산양식 변화와 출산패턴 변형	18세기 중반-20세기 초반 서유럽, 노동계급 가족의 특징
농노 가족	만혼 혹은 비혼	결혼은 특징적으로 늦었고(평균 초혼연령 대략 26살) 보편적이지 않았다. 경작지의 가용성(토지점유권 상속여부)에 따라 결혼이 지연되거나 억제되었다.
원산업 가족	출산이 선호됨	가내 공업이 성장하면서, 토지의 긴요성이 약화. 초혼 연령이 낮아지고 출산이 선호됨. 아이가 물레를 돌릴 수 있으면 스스로 밥벌이는 하는 것이었다.
초기 pt가족	높은 출산율	출산 인센티브 상승. 10~18살 자녀 2~3명의 소득은 가구 전체 소득 40~60%. 그러나 산업 도시의 상하수도 문제는 영아사망률도 높여. 높은 출산율과 높은 영아사망률의 결합은 여성노동력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했고,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으며 건강을 악화시켰다.
후기 pt가족	출산율 감소	아동노동 금지, 보통 교육 출현으로 일인당 양육비는 크게 높아졌다. 노동계급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패턴이 양에서 질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 부모들은 '좋은 교육'을 물려주려고 했다. 여성들의 출산 통제와 결혼 생활에서의 피임은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출산 방정식>

“특정한 생산양식 하에서 노동계급의 출산 동역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호보완적 또는 모순적 조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든 특수한 역사적 생산양식은 자신만의 특수한 인구 법칙을 가진다...”

Marx, 『자본』 1권

“인구는 예를 들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계급들을 무시한다면 하나의 관념이다...[관념 속에서 인구는] 전체에 관한 혼란스러운 개념이다.

Marx,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
마르크스주의
& 페미니즘
”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이라는 두 개의 나침반으로
대안 세계를 향한 길을 모색하자.**

“
마르크스주의
& 페미니즘
”

인구감소 문제는 자본주의의 '외연적 성장'의 한계를 뜻한다

현실사회주의도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했음

자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적 구조에 대한 상상

성별화된 시민권으로 새롭게 쓰이는 '모성'

여성들이 출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가족/교회/국가의 간섭 없이 임신의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양육의 방식을 공동체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

여성이 '아이를 가지려는 소망'과 '나만의 인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거나
혹은 기약 없이 권리의 행사를 보류하는 상황은 현대 시민권에 '권리로서의 모성'의 자리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방증.

: 청년[19~34세] 여성 44.7% '출산의향 없다' (*남성 29.5%)

: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 35.7%로 꾸준히 증가추세. 출산연령 고령화로 난임 비율도 늘어.

“
마르크스주의
& 페미니즘
”

청년·여성들, 미래세대가 처한 현실에 부합하는 사회운동

여성의 이중부담 문제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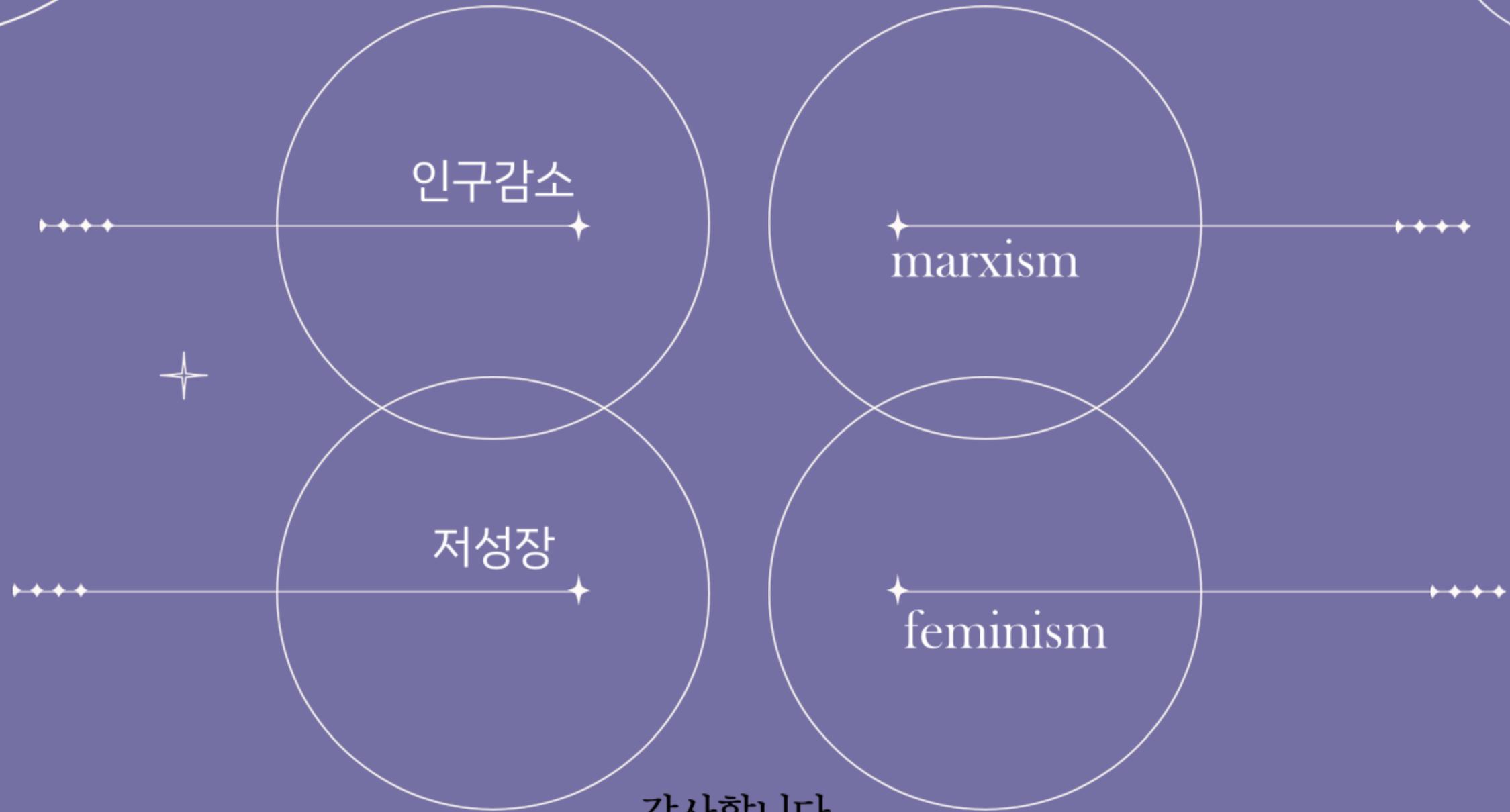
사회적 노동 참여와 더불어 성·재생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

ex. 돌봄제도의 사회화

정년연장, 임금체계개편, 연금개혁 등 지체된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운동으로 거듭나야.

PSSP 등촌동 워크숍(2)

✦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감사합니다.

